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2, 4면

천안함 사건
원인 논란

5~6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8~10면

1953년
동독 노동자 반란 70년

12~13면

우크라이나
전쟁

14~16면



천안함 사건은

정부의 일부 증거 비공개로

여전히 원인 불명이다

관련 기사 5~6면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구속했다.

윤석열이 집회·시위 강경 대응을 지시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사회적 대화 노선을 표방해 온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래서 5월 1일 한국노총은 7년 만에 대규모 장외 노동절 집회를 열고, 일방적 노동개악과 노조 무시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을 더 늦추지 않고 5월 하순에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 배제와 한국노총 포섭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한국노총 간부들을 패대기 치고 곤봉을 휘두른 것이다. 당근과 채찍의 서투른 조합이다.

금속노련과 김만재 위원장은 한국노총 내에서 대표적인 대여 강경파다. 5월 1일 집회에서 김만재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 시기 집중 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광양 농성 현장에서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윤석열은 최근 수년간 전투적으로 싸우며 성장해 온 건설노조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5월 16~17일 1박 2일 파업 집회 건으로만 29명을 기소했다. 6월 9일에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대화 원천 거부가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통한 대화 파트너 확보 책략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윤석열의 노동 공격에 맞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5월 31일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투쟁 대회

또, 경찰은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 찬반 투표를 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4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 때리기에 나선 것은 신경질적이 된 윤석열의 초조함과 다급함을 보여 준다.

윤석열식 파트너 고르기

김대중 이래로 역대 정부들은 노동개악을 추진할 때 노사정 타협 방식을 사용해 온건파 노조 지도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고자 했다.

정리해고와 파견법 등을 민주노총·전교조 합법화 등과 맞바꾼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 등이 모두 노사정 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불참한 상태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사정 타협 모양새를 취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를 포섭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 때는 노동개악 저지 양대 노총 공공부문 투쟁이 도화선이 돼서 거대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한국노총 지도부를 대화 파트너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새로고침노동조합 협의회’(이른바 MZ노조)를 띄워 주며 대화 파트너로 삼으려 했으나, MZ노조도 주69시간 근로제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올 3월 한일 관계 개선에 우선 나서면서, 주69시간제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인기 없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주들의 노동개악 요구가 강해서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론 윤석열도 노동계 파트너 확보에 무관심한 건 아니다.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대화 원천 거부가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통한 **대화 파트너 확보 책략**이다.

윤석열은 한국노총 내에서 특히 사회적 대화 노선을 오랫동안 대표해 온 이정식을 특별히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사회연대전략(정규직이 기업주에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방안)을 설파하는 데 앞장서 온 한석호를 정부 기구에 끌어들이었다.

동시에, 부패, 간첩 혐의 등으로 소수를 공격해 고립·위축시키면,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져 노동개악에 협조하는 다수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자기 최면

이런 책략은 윤석열 뜻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지배계급이 계급세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노조를 때리면 윤석열 지

지율이 올라간다는 주장은 우파에게나 노동조합 온건파에게나 자기 최면일 뿐이다.

한국노총 간부들을 공격한 직후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졌다. 서울시의 경제정보 오발령 등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이 혼선을 빚는 바람에 불신을 초래한 영향이 컸겠지만 말이다.

건설노조 탄압은 양회동 열사 분신으로 이어져 파업이 벌어지면서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런 압력을 받아 윤석열 퇴진 구호를 채택하고, ‘각계’에 퇴진 운동 연대체를 제안했다.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에 보건노조도 항의 투쟁을 시작했다.

이런 저항들 때문에 윤석열이 최근 신경질적이 돼 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윤석열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 윤석열의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운동의 저항이 불충분하거나 정치적 임팩트가 적은 상태가 지속되는 ‘행운’이 윤석열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문재인 임기 말이 그랬다.

지금은 길어지는 경제 침체와 더한층의 경제 지표 악화 속에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사용자들도 필사적이다. 윤석열은 이에 부응하려고 노동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노동계급 일반의 투쟁이 전개돼야 한다.

김문성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분노와 반대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장호중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한국의 고리 핵발전소에서도 매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바다로 배출되는데 그보다 적은 양의 삼중수소를 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한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IAEA와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한국 등이 삼중수소를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해 온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는 국제 기구들과 정부들이 체계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일부 연구들에서는 삼중수소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조사'도 통계를 왜곡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삼중수소만, 그것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말하는 양만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 내 일부 양심적 연구자들과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은 도쿄전력을 믿을 수 없다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IAEA를 포함해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사용한 오염수 시료는 모두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인데,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그 시료의 적절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염수 시료에서 일정한 비율로 발견돼야 할 방사성 물질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지역 인근 해역에서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세슘)에 오염된 생선이 계속 잡히고 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는 끝난 게 아니다.

도쿄전력은 사고가 난 지 12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로봇을 이용해 1호기 격납용기 하단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격납용기를 녹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전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1시간만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방사선



윤석열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운동이 필요하다

때문에 보강 공사는 꿈도 못 꿀 일이다.

도쿄전력은 이번에도 구조물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이 지역에 추가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격으로 구조물이 붕괴할 경우 고농도의 오염수가 대량 발생할 것이고, 녹아내린 핵연료에 다른 구조물들이 부딪히면서 재임계(발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태는 크게 악화될 것이다.

‘괴담’

6월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검증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에 대해 ‘제2의 광우병 괴담’ 운운했는데, 혹여라도 2008년 촛불 운동 같은 일이 재현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오염수 반대 여론이 거리의 항의 운동으로 발전할 조짐이 보이자 이 쟁점을 국회 안에 가두려고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5월 20일 서울 집회에 대거 참가한 데 이어, 6월 3일에도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 특위 설치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거리의 항의 운동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

가도 언제든지 원내 교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이어 터진 악재들(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처하고 대여 공세로 전환하는 카드 중 하나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부각하려 한다.

그러나 국회 특위 설치와 청문회 과정은 지루하고 답답한 공방을 벌이며 시간만 끌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다 앉혀 놓고 따진다 한들 그 위험성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국힘은 IAEA 발표가 난 뒤에 청문회를 열자며 시간을 끌 심산이다. 그럴 경우 민주당이 국제기구의 결정에 정면 도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실상 최종 승인이 난 셈이니 일본 정부는 방류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사 일본의 방류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운동이 성장하면 정부에 추가 규제를 요구하는 등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과 진보당, 환경 단체들이 정당연설회, 집회 등을 열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운동들이 더 늘어나고 더 커져야 한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크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9 772005 821003

24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김승주

5월 25일 경찰은 금속노조가 3년째 열어 온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돌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했다.

며칠 뒤인 31일 한국노총의 고공 농성과 민주노총의 양회동 열사 분향소가 폭력 진압당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물대포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6년 만에 캡사 이신 분사기도 집회 현장에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노동자가 짓밟힌 현장을 두고 “경찰다운 경찰이 불러온 평화”라며 노골적으로 윤석열과 경찰 폭력을 응원했다.

이처럼 윤석열은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우파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나름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윤석열의 강공책은 윤석열 정부가 처한 위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저변에서 부글부글 끓는 반정부 정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대규모 항의로 분출될까 봐 부심하고 있다.

3~4월 20퍼센트대까지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최근 회복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 평가가 50퍼센트를 훌



정부의 강경 대응은 그만큼 대규모 항의 운동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31일 고공 농성 중인 금속 노동자를 구타하는 경찰

쩍 넘는다. 부정 평가 안에서도 “매우 잘못한다”가 “잘못하는 편”의 곱절을 넘는다.(관련 기사: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본지 6월 2일자’)

6월 4일 대구시장 홍준표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쯤이면 한 60퍼센트는 돼야 한다.”

윤석열 정치 위기의 근저에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실업 방지, 전세 사기 피해자 방지 등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있다.

친미 안보 노선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문제, 미·일의 자국 우선주의 문제 등으로 모순이 더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과 경제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건설노조가 정부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자 윤석열이 집회·시위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반정부 분위기의 확산을 강압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싸울 자신이 없지 않은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경찰 폭력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는 결국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의 노동운동 탄압은 운동의 위축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저항 옥죄기를 생계 위기, 평화 위협 친서방 정책 등과 연결시켜 대정부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폭력성 — 경찰의 고칠 수 없는 본질

7미터 고공, 좁은 망루 위에 선 노동자 한 명을 무장한 경찰 여러 명이 곤봉으로 마구 때려 진압하는 등 최근 경찰의 폭력 만행은 충격적이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겨누는 경찰의 잔인한 폭력은 독재 정권 때나 벌어지던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단지 몇 가지 사례만 들면 아래와 같다.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경찰은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벌이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진압에 항의하며 윗옷을 벗고 연좌한 노동자들 위를 기습해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찍고 군홧발로 짓밟으며 쓸어버리는 장면은 지옥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의 경찰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점거한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연대 단체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다. 특히, 완

전 무장한 경찰특공대가 공장 옥상에서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집단 구타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농성 중이던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여성 노동자들이 상의를 벗고 처절하게 저항했다.

한국만이 아니다

이러한 경찰 폭력은 한국의 일만도 아니다. 200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G8 반대 시위에서, 2009년 영국에서 열린 G20 반대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게 구타나 충격을 당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9년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정부의 경찰이 ‘노란 조끼’ 시위대에 야만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의 최루탄에 시위 참가자의 손이 날아간 사건도 있었다. 이때 창설된 시위 진압 특별조직 ‘브라브엠’은 올해 벌어진 연금 개악 반대 시위에서도 권총, 최루탄, 확장형 봉으로 무장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위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 다지만, 이처럼 일부 국민이 정부나 기업주에 도전하기 시작하면 인정사정없는 태도로 돌변해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그 국민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경찰의 억압성과 폭력성은 경찰이 현 사회에서 수행하는 본연의 구실과 관계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극소수인 지배자들

이 대다수인 평범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 사회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독하게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사회에서 지배자들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동의와 강제를 모두 필요로 한다.

경찰은 바로 ‘강제’의 핵심적 수단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찰, 군대, 교도소 같은 폭력 기구의 강제력 없이는 한순간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려 하고, 이결로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강압에 더 의존하려 한다.

그 속에서 벌어진 최근 경찰의 만행들은 경찰이 개혁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할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김영익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는 이래경 이사장이 천안함 희생자를 모욕하고 “왜곡된 반미친중 발언”이나 하는 “음모론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 비명계 정치인들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당 안팎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이재명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며 물러섰다.

북한에 의한 폭침?

'천안함 자폭'은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음모론에 가깝다. 이래경 이사장 본인은 6월 7일에 쓴 글에서 “자폭”이 “과잉 표현”이라고 인정했고, 천안함 사건은 “원인 불명”이라고 정정했다.

반면, 우파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한다. 의도적인 규정이 아니라면 확증편향이다.

침몰 사고 무려 두 달(2010년 5월 20일) 만에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하지만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도 자신들의 행위라고 인정치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사건 관련 기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계속 제기됐다.

예컨대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거했다는 북한 '1번' 어뢰 부품의 증거 능력에 의문이 있고, 어뢰가 발사됐다는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에 관한 정부의 말은 이후 “소형 잠수정”이라고 부르는 등 바뀌었다.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는 어뢰 폭발 때 생기는 거대한 물기둥, 생존자들의 고막 손상 같은 증거가 천안함 사건에



증거 불충분 우파는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믿으라 하지만 그들은 술한 '북풍'을 조작한 전력이 있다

서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합동조사단이 내세운 증거는 모두 기껏해야 방증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풀리지 않는 의심들에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내세워 대응했다. 그것이 무슨 증거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 온 전력이 무수하다. 1965년 베트남 전쟁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은 증거를 조작해 전쟁 명분을 만들어 냈다.

정의당은 이래경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 등을 두고 “음모론”이자 “상식 밖의 연사”(대변인 논평)라고 비판했다. 그 자체로는 틀린 지적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 공식 발표(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대선 때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관련해 당시 정부 조사 발표가 국민적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대변인 발표가 있었다.

진보당은 이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파는 천안함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해 왔다. 그러나 좌파는 정부가 증거 불충분 상황을 만들어 놓아 지금까지는 원인을 알아 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 6면 하단으로 이어짐

Q 천안함 사건 배경 체크

사건이 일어난 2010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중 갈등과 이명박의 호전적 대북 정책이 맞물리며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던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2009년 서해상의 교전수칙을 기존보다 더 공세적으로 바꿔 냈다. 서해상의 군사력도 증강 배치돼, 천안함 같은 대형 초계함이 북한 코앞에 전진 배치됐다.

그래서 3월 천안함 사건에 이어 11월 연평도 상호 포격까지 그해 서해에서 사건과 충돌이 이어졌다. 점증된 긴장이 충돌을 부르는 악순환이 작동하고 있었고, 설령 천안함 사건이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밝혀져도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닌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위협'을 부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자국의 전략을 동아시아에서 관철하려고 했다. 오바마는 천안함 사건을 명분 삼아, 악명 높은 후텐마 미 공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려는 하토야마 당시 일본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

한국 이명박 정부도 위기정국을 돌파하는 데 천안함 사건을 이용했고,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사건의 진정한 원인과 상관없이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이 실패했음을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에 휘말린 한반도의 장래 불안정 심화를 할 것 보여 줬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최근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이것은 저출생·고령화로 늘어나는 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계획의 일부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현금 복지 축소(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으로 최소화), 복지서비스 통폐합과 함께 추진된다.

윤석열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면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 종사자의 보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이미 압도적으로 민간업자가 공급하고 있다.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99.5퍼센트(총 2만 1334개소 중 2만 1208개소)가 개인·법인 등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86.1퍼센트(총 6만 594개 중 5만 1920개소)가 민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민간시설은 서비스 질이 낮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사설 요양원에서 종종 일어나는 학대와 부정·비리는 악명 높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요양원은 공급이 매우 적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 대기 인원이 많다. 극소수 공공요양원은 대기 기간이 몇 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돌봄 확충은커녕



서울요양원은 대표적인 공공복지 시설이지만 대기자가 많아 '10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를 더 축소할 방침이다. 이미 공공돌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곳곳에서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더 촉진하는 방안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에는 영세한 공급자가 많다. 종사자가 4명 이하인 공급자가 44.7퍼센트에 이른다. 그런데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려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에서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것은 늘어나는 수요를 기업들에 맡겨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민영화·시장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규모 요양기관이 성

장했지만,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낮다. 2011년 영국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고급 사설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받은 학대가 폭로된 바 있다. 그 뒤 이뤄진 정부 조사에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질이 민간기관의 서비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

규제 완화는 기업을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의 가격 인상 방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비스 비용 상한을 완화하고 ‘가격 탄력제’도 도입하려 한다. 가격 탄력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시범 사업 실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조처는 서비스 비용을 높일 것이다. 서민층에게 필요한 복지 제공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서비스 가격 차등화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비싼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외면할 것이다.

재정 긴축과 복지 예산 삭감으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있고 복지 분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도 공격받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시설 확대와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기업과 부유층에 매기는 세금을 높여 정부의 복지 재정을 늘려야 한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정진희

▶ 5면에서 이어짐

‘북풍’의 경험

그동안 우파 정부와 우파 일반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묵살하고 정부의 결론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올려댔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에 남북관계에서 대중을 속이고 조작을 서슴지 않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남북 지배자들이 더러운 공모를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총풍 사건’이다. 199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대북 교역사업가 장석중 3인이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한 측에 돈을 주고 판문점 총격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996년 총선 직전에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격을 벌인 일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

영삼 정부가 북풍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북한 측에 요청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영화 <공작>이 바로 이 일련의 북풍 공작을 다루고 있다.)

1987년 수지 김 사건도 한국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었다. 진실은 한국 기업의 당시 홍콩 주재원 윤태식이 홍콩에서 자신의 처(수지 김)를 살해하고는 처벌이 두려워 월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이었다. 안기부(국정원의 전신)는 이 사실을 알고도 국내 정치에 이용해먹을 계산으로 이 사건을 ‘여간첩 수지

김의 남편 납북 기도 사건’으로 진실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조작 발표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경찰·국가정보원·군에서 여론 공작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진압 등에서 과잉 진압에 관한 진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한 한국인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주장을 믿지 못하고 각종 음모론과 확증편향이 난무하는 것은 이래경 씨 탓이 아니다.

수출 부진, 부동산 침체로 다시 커지는 금융 불안정

강동훈

최근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위기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퍼센트로 전월에 비해 0.032퍼센트포인트 올랐다. 또, 5대 시중은행이 5월 초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를 연장해 준 대출이 36조 6206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은행들은 모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제2금융권 대출은 금융회사 3곳 이상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율이 높아 한 곳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다른 금융사에서 연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심화로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올 1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은 399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6퍼센트나 급증했다. 지난 1분기에 저축은행 79곳 순손실 총액이 523억 원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도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이 10.4퍼센트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로 증가했다.

제2금융권보다 규모가 큰 지방은행들도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이 지방 중소기업과 부동산 PF 대출임을 감안하면, 지역 경기 악화로 중소기업과 부동산 부실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체율 상승

이처럼 전 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금리 상승,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과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 대출뿐 아니라 가계 대출 연체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금리가 계속되는 데다 부동산·기업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시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 정책 정책이 오는 9월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 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110조 6000억 원이 증가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을 만큼 경기가 좋지 않아 올해 성장률은 '상저하저'가 될 공산은 매우 커졌다.

한국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5월 무역수지도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퍼센트 감소해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적자도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째 계속됐다. 특히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2퍼센트나 감소해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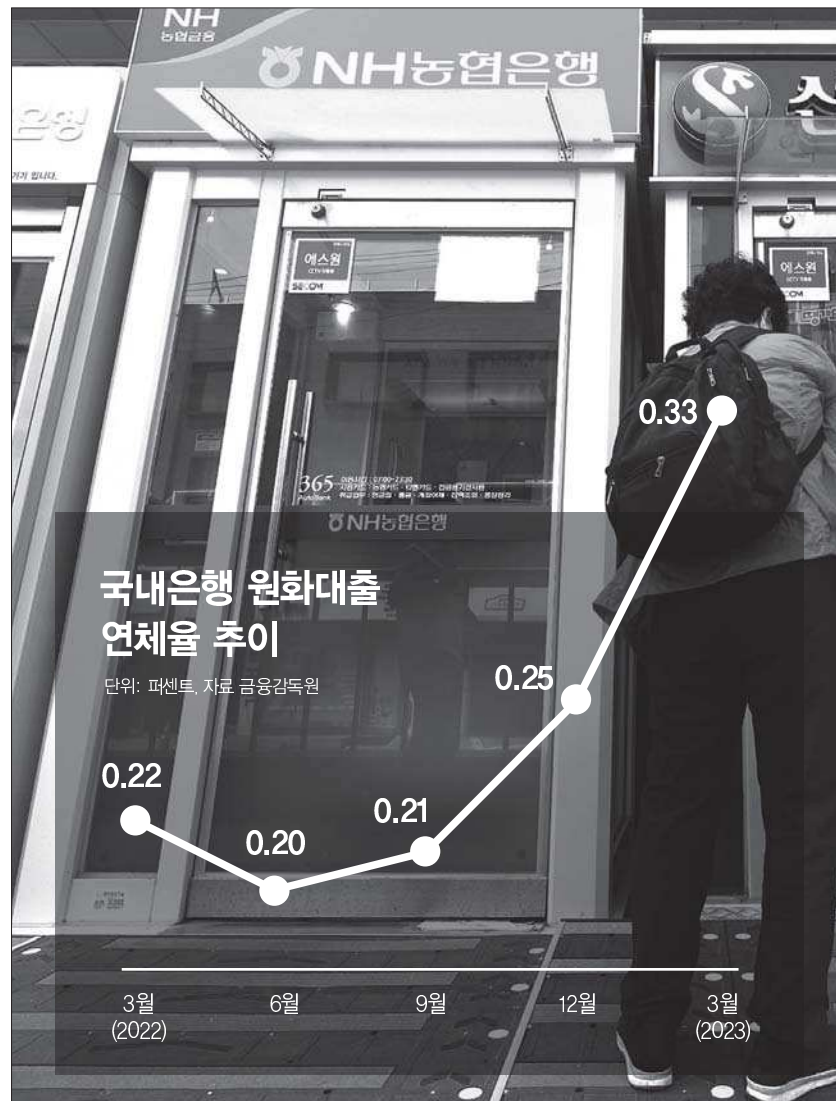
한편,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촉발될 수 있는 미국의 은행 위기 위험성도 여전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년 안에 사무실과 쇼핑몰 등 상업용 부동산에서 부실이 터져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이 6조 6000억 달러(약 8600조 원)에 이른다. 부동산 기업들은 조만간 대출을 연장해야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은행 위기를 촉발한 공산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은행 위기는 한국 금융권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퍼센트포인트로 벌어져 있어서, 금융 불안정이 조금만 확대되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며 외환위기가 터질 공산도 커진다.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전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장 난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은 노동자 등 서민층에 떠넘기려는 공세를 벌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자 올해 세금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서민층을 위한 복지 지출도 삭감될 것이다. 이미 전기 요금을 또 올려서 냉방비 폭탄을 던진 바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층 고통은 외면하고, 부자 감세와 긴축 정책으로 위기의 대가를 보통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연체율이 치솟으며 금융 불안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정의당의 “협치” 요구는 투쟁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편, 이렇게 경제 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의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다시 촉구했다. “경제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말이다.

그러나 협치 제안은 설사 정부의 서민 고통 증대 정책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노동자 투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을 밀어붙이고, 노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등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때에 투쟁을 발전시키기보다 정치권의 논의로 사안을 끌고 가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협치”를 하면 그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여당의 노동자 공격에 물렁하게 반응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최근 정의당이 정부·여당·민주당과 한 ‘협치’의 결과물인 전세사기특별법은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누더기가 된 바 있다.

이렇듯 정의당이 정부와의 “협치”를 추진하면 정의당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지자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게 만든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개악을 비판해 온 정의당은 정부에 맞선 투쟁들이 확대되도록 도와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임준형

이 글은 6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
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서는 조선족 등 재외 동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만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주로는 동남아시아 출신자도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 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이 든 부모를 누가 어떻게 모실지를 두고 자녀들이 갈등하는 일을 주변에서 보거나 직접 겪어 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더라도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시장에 내맡겨져 있고, 수익성 위주로 운영됩니다. 개별 가정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서비스를 비싼 비용을 치르며 이용해야 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열악합니다.

정부가 돌봄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돼야 하고, 필요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공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지출이 대폭 확대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필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공공 노인요양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모두 전년 대비 20퍼센트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책임을 회피하며 저렴한 노동력 투입으로 때우려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사·돌봄 부문에 유입되는 것을 반대해야 할까요? 가사노동자를 조직

해 온 가사·돌봄유니온과 한국YWCA 연합회, 노동계 주요 조직인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은 모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문제가 여러 부문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건설노조의 일부 지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을 목인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와 조선업계 노조들이 조선업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문들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숙련된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것은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고용되는 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비록 임금과 노동조

건이 열악한 부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서 단연 가장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 유입 반대?

물론 노동조합들과 좌파 정당들이 논골적으로 이주노동자 반대를 내거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경우, 대체로는 그 이주노동자들이 처할 열악한 조건과 차별을 지적하며 반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정훈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이 낸 고약한 법안이 반발심을 부추겼을 듯합니다.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고 월급을 100만 원만 주자고 하고 있죠.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고용허가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폐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

폐해란 이주노동자의 이직과 업종 변경을 제약해 형편없는 조건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미등록 체류로 내몰고, 살인적인 단속과 추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조건과 차별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가령 지난해 조선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도 차별을 당합니다. 그들은 조선소 내 업무 중에서도 고되고 힘든 일을 맡아 하는데도, 임금은 한국인 조선소 노동자 평균 임금의 8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조선소 이주노동자 일부가 이탈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열악한 조건과 관련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막으면 그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행이 막히면 그들은 다른 나라의 열악한 일자리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초부터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렵다면 자국의 더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실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가사노동자.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민하려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자본주의 발전의 지역적 불균등, 자본주의가 낳는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외국으로 이주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국제적 인구 이동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국제 이민은 꾸준히 증대해 왔습니다.(그림1) 우리나라로의 외국인 유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민하려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욕구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옥죄고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에 반대한다면, 이주노동자 유입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이민 통제를 반대해 싸워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면 내국인 고용·임금이 타격을 받는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을 우선 지키자는 것이 진정한 동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 능력과 노동 의사가 있는 중고령자들이 진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월 28일 KBS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이 정착되고 나면 국내 노동자들이 더 유입될 것이다. 그 전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진보당은 공식 논평을 내어, “국내 인력보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여 노동의 값을 후려치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는가!” 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조선업과 건설업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의 전제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임금이 낮은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면 그 부문의 임금이 떨어지고 내국인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림1. 국제 이민자 수 추세

자료: 국제이주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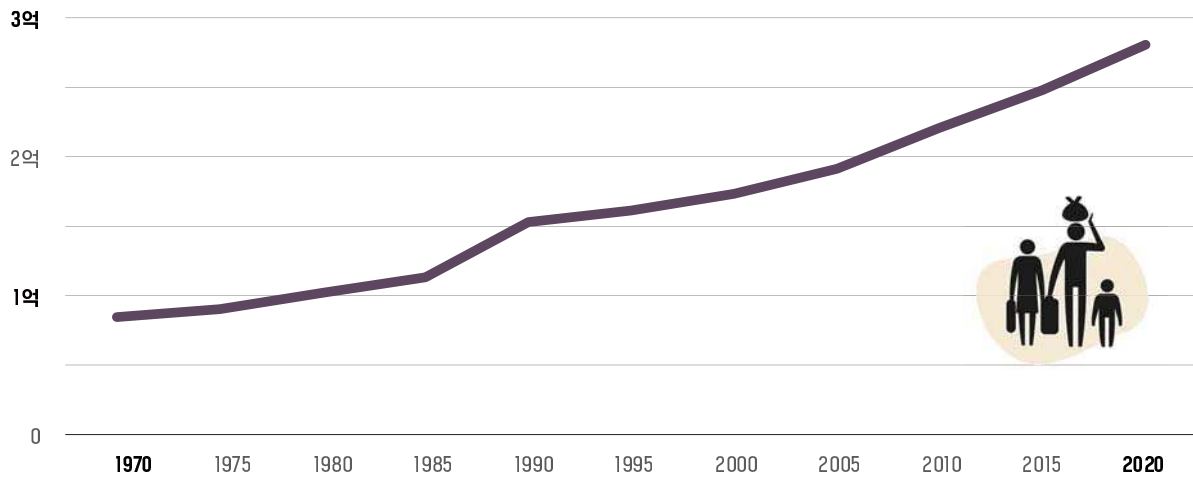


그림2.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고용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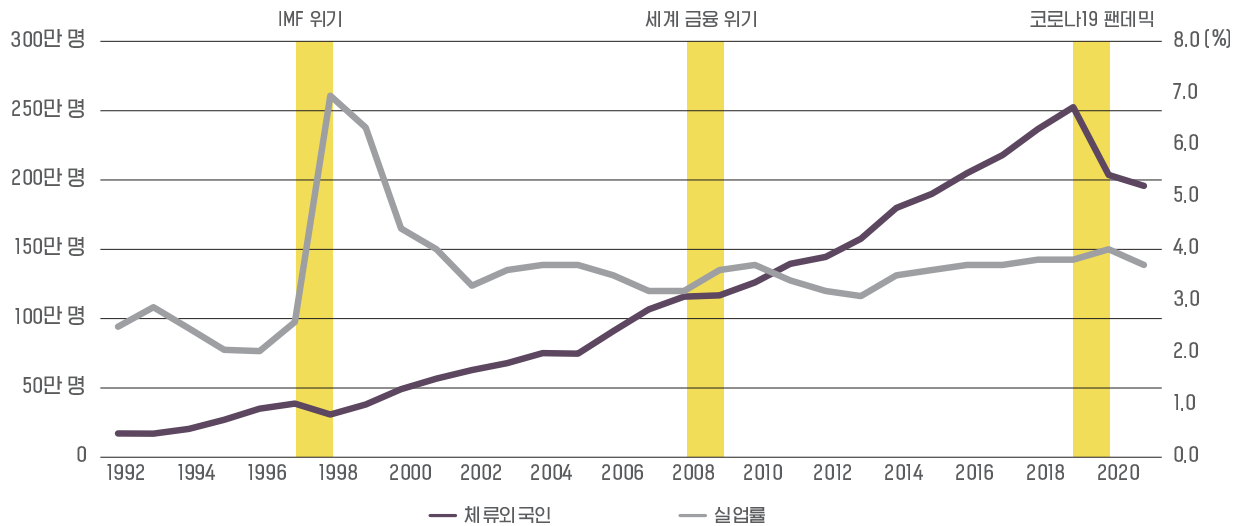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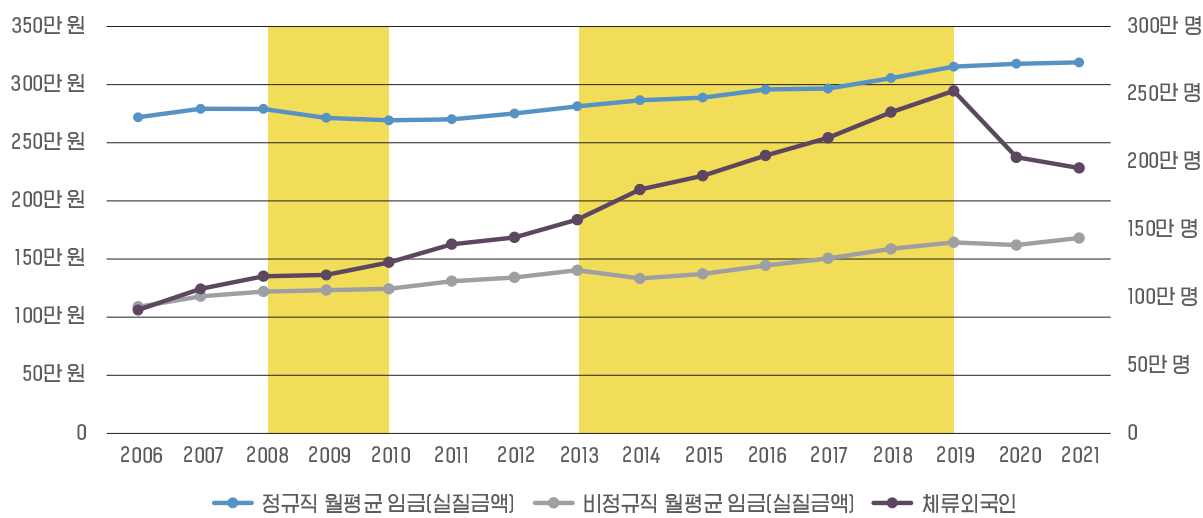


그림3.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우선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고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 위기를 크게 겪은 것은 1997~1998년과 2008~2009년인데, 당시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어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그림2) 이주노동자 수는 1997년 24만 5000명에서 1998년 15만 8000명으로 급감했지만, IMF 위기로 실업률이 크게 뛰었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에 이주민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이주노동자 수가 줄었지만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2020년 한국 전체의 고용률이 1.3퍼센트 감소하고 실업률이 0.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민자의 고용률은 1.7퍼센트 감소하고 실업률은 2.1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부 기간 이외에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일자리 감소가 경제상황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 증가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정부 설립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숙련 부문과 건설업에서는 이민 증가로 내국인의 고용이 적잖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민 증가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서 내국인 건설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주노동자는 생산 효과 54조 6000억 원, 소비 지출 효과 19조 5000억 원 등 총 74조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즉, 저숙련 부문과 건설업도 이주노동자가 유입된다고 해서 내국인 일자리가 자동으로 줄어들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 증가가 내국인 노동자 임금 수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주춤했던 이주노동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2013년 이후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3)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주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실질임금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2013~2014년 이주노동자 수가 다소 급격하게 증가하자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듯했지만, 장기 추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 속에서 2008~2010년 이주노동자 수는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정규직의 실질임금은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돼 이주민 수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비정규직의 실질임금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단결과 저항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노동시장에 저임금, 저숙련의 이주노동자가 새로 유입되는 것이 고용과 임금 감소, 노동조건 악화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로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과 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항하느냐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됩니다. 일자리 수나 임금 수준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몫이 있어서 이를 노동자들끼리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몫을 줄이려는 사용자에게 맞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하면 일자리를 지키고 복지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대불황기 미국과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19년 이주노동자들의 서울 도심 행진.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한 유입 반대는 내국인 우선 논리의 가림막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 효과는 조사 연구에 따라 4~8퍼센트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앨 시먼스키는 1970년대 미국 50개 주를 비교 연구한 결과, 흑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강한 곳일수록 백인 노동자의 소득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노동계급의 분열이야말로 일자리와 임금에 해로운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한정된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볼 게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고 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하는 것은 소박한 연민일 수는 있어도 이런 도덕주의는 아무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맞벌이 부부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국인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자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협소한 부문주의를 가려 주는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대와 단결을, 투쟁을 꺼리는 태도인데도 말입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와 정당들은 지난해 시행되기 시작

한 가사근로자법이 정착되면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시장 지향적 문제점을 폭로하며 오히려 조건 개선을 위한 연대와 단결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이번이 시범사업을 중단시켜 일시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유입을 막더라도, 이주노동자 유입을 계속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정부의 주기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미등록 이주민은 꾸준히 늘어, 올해 4월 기준 41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이주민의 약 18퍼센트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이들 중 일부는 가사노동자로 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이 이미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 좌파 정당들이 이주노동자 고용·유입 제한 입장을 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노조나 노동운동을 불신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의존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과 임금 인상의 장애물로 여기는 정서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모두 더 열악하게 만드는 압력이 커질 것입

니다.

요컨대 내국인 노동자들을 우선 보호하자며 이주노동자 유입을 제한해서 얻을 '이득'은 기껏해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들에게는 결국 더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결론

고령화와 저출산, 이에 따른 정부의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 정책 등으로 앞으로 우리는 일터와 일상생활 곳곳에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주민과 직접 부대끼며 친숙해지면 가장 조야한 형태의 편견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배계급이 끊임없이 노동계급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국민 국가들로 나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인종과 국적에 따른 지배자들의 이간질이 잘 먹혀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간질이 통하면 노동계급 전체의 힘은 약해집니다.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동을 옹호하고 이주노동자를 방어하는 관점이 확고해야 그런 이간질에 일관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상이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추구하는 국제주의 관점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열차 충돌 참사

인력 부족과 정부의 재정 삭감 때문이다

찰리 김버

인도 정치인과 기업주들이 조성한 철도 환경이 지난 6월 2일 저녁(현지 시각) 끔찍한 열차 충돌 참사로 이어졌다.

권력자들은 몇몇 개인들을 희생양 삼아 참사에 대한 분노를 모면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바로 권력자들의 정책 탓에 벌어졌다.

5일 현재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300명 가까이 되고, 부상자는 1000명이 넘는다.

서벵골주(州) 콜카타와 타밀나두주(州) 첸나이를 오가는 고속 열차 '코로만델 익스프레스'가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에서 화물 열차와 충돌했다.

그 뒤 화물 열차는 맞은편 철로를 달리던 초고속 열차 '하우라 수퍼패스트 익스프레스'와 충돌해 객차 몇 량을 탈선시켰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모디는 자기 자신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다. 사고난 열차들의 번지르르한 이름 이면에는 인력 부족과 안전 예산 부족으로 누더기가 된 철도망이 있었다.

누더기가 된 철도망

일간지 <더 힌두>는 지난 1월 이렇게 지적했다. "인도철도는 전국 18개 철도 지구에 걸쳐 31만 2000개의 직책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등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더 힌두>는 한 몸바이 철도 노동자의 말을 인용했다. "2교대제로 한 번에 최대 16시간까지 일하고 있어요. 교대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더 힌두>는 참사 바로 며칠 전에 또 다른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곳곳에서의 열차 사고 증가세를 우려해 철도청은 공석을 충원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인도 감사원은 "인도철도[IR, 인도의 준공영 철도 기업]의 탈선"에 관한 2022년 보고서에서 기준에 미달한 항목을 여럿 지목했다. 이번 참사 후 많이 거론된 선로관리시스템(TMS)의 부실함도 있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TMS는 운행 중인 선로의 정비 상태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중앙 TMS에 내

재된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NRMU)이 인력 부족으로 보직이 너무 많이 비어 있는 상황에 항의했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려 합니다. 초과 근무가 많고 휴가가 모자라서 직원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직무 수행에 악영향을 줍니다." 노조 사무총장 베누 나이크의 말이다.

철도 전문가이자 인도에서 일어난 탈선 사고들을 다룬 중요한 연구서의 주 저자인 프라카쉬 쿠마르 센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며 업무량이 너무 많고 휴식 시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참사가 벌어진 동부해안선은 인도에서 오래되고 이용량이 많은 노선의 하나이며, 인도의 석탄·석유 화물 대부분이 이 노선으로 운송된다고 센은 지적했다.

기업주·정치인들에게 승객과 노동자의 목숨은 하찮다. 2021년 인도 전역에서 철도 사고가 1만 8000건가량 일어나 1만 6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그 중 3분의 2 이상이 객차가 너무 붐비서 차량 지붕 위에 탔다가 추락하거나 선로에서 열차에 치인 경우다.

바로 지난주에도 자르칸드주 단바드시(市) 인근에서 철도 노동자 여섯 명이 전봇대를 세우다 그 전봇대가 고장력 가공 전선으로 넘어져 감전사했다.

목격자들은 당시 노동자 8명이 안전 장비도 없이, 전기를 내리지도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극우 정치인 모디가 집권한 뒤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모디 정부의 실제 관심사는 대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를 억누르고, 지독한 이슬람 혐오로 빈민들을 분열시키는 데 있었다.

철도부 장관 아쉬위니 바이쉬노는 "불운한 이번 열차 사고" 사망자의 유족에게 고작 100만 루피(약 1600만 원)를, 중상자에게는 고작 20만 루피(약 320만 원)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디는 이 참사를 "불의의 열차 사고"라고 불렀다.

모디와 그의 패거리의 이번 참사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를 맞싸야 한다.



사진 출처: AIC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이 낳은 인재(人災)다

거듭되는 참사

1999년 8월, 구와하티시(市)에서 열차 두 대가 정면 충돌해 최소 28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해 전인 1998년에도 인도 북부 도시 칸나에서 열차가 충돌해 21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 철도 역사에서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손꼽히는 열차 충돌 사고는 1995년 뉴델리 인근에서

일어난 사고다. 열차 두 대가 충돌해 358명이 목숨을 잃었다.

더 가깝게는 2016년에 인드르-파트나 노선을 운행하던 여객 열차가 탈선해 최소 14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에는 서벵골주(州)에서 여객 열차가 탈선 후 화물 열차와 충돌해 145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출처 Charlie Kimber, 'Cuts and lack of workers behind horrific Indian rail crash' (2023. 6. 3) / 번역 김준호

1953년 6월 동독 노동자 반란 70년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에 맞선 저항의 신호탄

성지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3년 6월 17일 동독에서 대규모 노동자 반란이 일어났다.

이 반란은 견고해 보이던 스탈린주의 체제의 균열을 보여 줬다. 또한 냉전이 끝날 때까지 동유럽에서 거듭 벌어진 노동자 반란과 저항의 시작을 알렸다.

이 반란은 소련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지만, 3년 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벌어진 노동자 혁명으로 바통을 넘겼다. 그리고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1980~1981년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 등 아래로부터 저항은 1989년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되풀이됐다.

1953년 동독 노동자 반란은 동독 지배자들을 악몽처럼 따라다녔다. 1989년 10월 동독의 보안 경찰 슈타지(국가보안부)는 상부에 이렇게 보고했다. "1953년 6월의 반혁명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달인 11월 베를린 장벽이 파괴되기 시작하자 공산당(SED) 관료 쿠르트 하거는 이렇게 말했다. "1953년보다 심각하다."

대체 1953년 동독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1953년 6월 15일 동베를린의 '스탈린 가로수 길' 인근의 프리드리히샤 병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수십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스탈린 가로수 길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사회주의적' 건설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그 한가운데서 노동자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책임생산량 증가 조치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보냈다.

1953년 동독 노동자 반란은 견고해 보이던 스탈린주의 체제의 균열을 보여 줬고 동유럽에서 거듭 벌어진 노동자 반란과 저항의 시작을 알렸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압도적 무력으로 진압됐지만 정부는 경제적 양보를 일부 해야 했다. 반란 진압에 투입된 소련군 탱크

다음 날인 16일, 파업 노동자들은 모두 정부청사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그들은 행진하며 다른 직장의 노동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사망에서 달려나와 마치 췌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시위대에 합류했다." 청소노동자, 세금징수원, 지나가는 전차 승객과 운전수까지 대열은 금방 불어났다. 건설 노동자들이 대중에게 불씨를 던졌고, 그 불씨는 커다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대열이 커질수록 구호도 정치적으로 변했다. "정부는 퇴진하라," "우리는 자유 선거를 원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

정부청사 앞에 무려 1만 명이 모였다. 성년 노동자들 앞에 나타난 하급 공무원들은 책임생산량 증가 조치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자리를 지켰다. "울브리히트! [당시 공산당 서기장] 그로테볼! [당시 정부 총리]라고 외치며, 시위대는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가 거절되자 그 자리에서 즉시 총파업이 결의됐다.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총파업을 호소한다," "베를린 사람들은 동참하자,"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곳곳을 행진했다. 밤새 라디오 방송과 화물 노동자들의 차량, 회사 전화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반란 소식이 퍼졌다.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하는 정부 청원은 순식간에 정부와의 정면 대결로 바뀌었다.

정면 대결

6월 17일 아침 집에서,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만나는 곳 어디에서나 '베를린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됐고, 동독의 산업 도시 대부분에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다.

동독 내무부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약 50만 명이 반란에 가담했다. 최근의 연구는 100만~150만 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한다. 이는 당시 전체 동독 인구의 6~9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시와 마을 700곳이 반란의 영향을 받았고, 1000여 개 일터에서 최소 5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17일 아침 파업 노동자들은 시내를 행진했고, 정권 퇴진, 자유 선거, 구속자 석방 등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 감옥을 습격해서 수감자를 석방시키고, 관공서에 불을 지르거나, 일부 관공서를 접수했다. 경찰서를 포함한 관공서 250곳 이상이 습격당하고, 수감시설 12곳에서 재소자 1400명 이상이 풀려났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전개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를 동안 동독 지배자들은 완전히 마비됐다.

소련군 탱크만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16일부터 이미 소련군 약 2만 5000명과 탱크 300대가 베를린으로 이동해 왔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17일 오후부터 계엄령이 선포됐다. 시위 금지령이 포고되고, 길거리에 3명만 모여 있으면 체포돼 재판에 회부되기 일쑤였으며, 야간엔 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각목을 들고 격렬히 저항했다. 하지만 압도적 우위의 무장력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반란을 진압됐고, 반란 지도자들은 수감되거나 처형됐다. 60~100명이 경찰과 소련 군대의 발포에 의해 죽었다. 최소 20명이 즉결 처형됐고, 1만 2000~1만 5000명이 체포됐다.

하지만 크게 타오른 저항을 한 번에 진압할 수는 없었다. 여진은 7월까지도 계속됐다.

동독 정부는 경제적 요구들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책임생산량 증가 조치가 철회되고, 7월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생필품 가격 인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탄압은 더 강화됐다. 반란에 동참한 공산당 SED의 당원들은 대대적으로 숙청됐다. 억압적인 법이 통과되고, 경찰력이 강화되고, 슈타지가 크게 강화됐으며, '공장 민병대'(정권에 충성하는 준군사 조직)가 설립됐다.

노동자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나

동독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서방이 사주한 “제국주의적 책동”이자, “반혁명적인 파시스트의 국가 전복 음모”라는 것이었다. 체포된 시위 지도자 대다수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지만, 정부는 이들이 서독, 또 나치와 연결돼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뒤늦게 서독 정부도 이 반란을 친서방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치켜세우고, 6월 17일을 국가 기념일인 ‘독일 통일의 날’로 제정했다.

하지만 반란이 진행 중이던 때 서독 정부는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다. 16일에 처음 파업이 일어난 후 서독 총리는 동독에서 누구든 “선부른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은 “위험한 행동을 멀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게다가 반란 물결이 서베를린으로 넘어 오는 것을 봉쇄하려고 서독 경찰이 국경선에 배치됐다.

소련 탱크가 베를린의 시위대를 공격했을 때 파업 지도자들은 서베를린 경찰서나 노동조합 본부로 달려가 무기 지원을 호소했지만 거절당했다.

반란의 진정한 원인은 첫째, 동독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수준이었다. 1947년 냉전이 시작되자 동독 사회는 스탈린주의 노선에 따라 재편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건설 가속화라는 소련의 지령 아래 동독은 20년 전 소련과 마찬가지로 소비재 생산을 희생시키며 중공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농업을 강제



1953년 6월 17일 브란덴부르크의 철강 노동자들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집산화했다.

불만을 가진 농민들은 서독으로 달아났다. 경작지의 10퍼센트가 방치돼 우유, 감자 등의 기본 농산물 생산량이 목표에 훨씬 못 미쳤다.

냉전의 최전선 국가로서 동독은 군대에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자했다. 15만 명을 군에 입대시켰고, 1952~1953년에만 국가 예산의 10퍼센트인 20억 마르크를 군사비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노동인구가 부족했고, 정부는 긴축을 실시했다. 인구 대부분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했다. 서독으로의 주민 이탈도 계속 증가했다.(베를린 장벽은 동독 정부가 주민 이탈을 막으려고 1961년에 세웠다.)

대중의 이런 생활수준 압박은 이후

로도 여러 해 지속됐다.

지배 관료의 분열

1953년 노동자 반란을 촉발한 둘째 원인은 1953년 공공연히 나타난 동독 사회 상층부의 분열이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죽었다. 그러자, 25년간 그의 심복 노릇을 하던 자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들은 서로 누군가가 모든 권력을 가로채 스탈린이 했던 것처럼 경쟁자들을 제거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다른 한편, 그들은 스탈린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련을 계속 통치할 수 없다고도 생각했다. 계속된 숙청은 살아남은 관료들이 뒷사람을 두려워하고 증오

하게 만들었다. 최상층 지도부뿐 아니라 그 밑의 관료층도 숨 쉴 틈을 원했다.

소련과 동유럽의 대중은 비록 보안 경찰의 활동으로 원자화돼 있었지만 대다수가 노동계급으로서 폭발적 잠재력을 지닌 세력이었다. 새 통치자들은 이제 그런 대중과 연결되는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소련 지배자들의 이런 필요는 1953~1964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처음에 누구도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서로 다른 처방과 상호 불신이 맞물려 끊임없이 갈등이 불거졌다. 당의 정책은 갈팡질팡했고, 인물들도 계속 교체됐다.

이런 상황은 소련의 위성국가인 동유럽 정권들에 더 증폭돼 나타났다. 동독 지도부는 그런 분열에 휘말린 첫 사례였다.

소련의 새 지도부는 6월 초 사회주의 통일당(SED: 동독 공산당) 지도부를 모스크바로 소환해 산업화와 집산화 속도를 늦추라고 했다. 어제까지 밀어붙이던 정책이 갑자기 뒤집히자 대다수 관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런데 책임생산량 증가 조처는 그 대로였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기존 정책의 급격한 수정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겼다.

관료층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동독 지배자들은 작업 기준을 놓고 벌어지는 집회나 토론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허용해야 할지 몰라 동요했다.

동유럽 — 국가자본주의 사회

앞에서 논술한 반란의 두 요인은 모두 동구권 사회 자체의 경제적·사회적 산물이었다. 즉, 반란의 원인과 동력은 국가자본주의 사회의 역학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민을 억압하는 사회였다. 지배계급인 국가 관료가 사회의 다수를 착취하고, 이렇게 노동계급을 착취해 얻은 부의 최대한 몫을 미래의 생산과 착취를 위해 투자했다.

주로 서방과의 군사적(그리고 경제적) 경쟁 때문이었다. 국가 관료는 서방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는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이는 관료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경제를 세계 경제의 리듬에 따라 위기의 늪으로 밀어넣으며, 강력한 사회변혁 잠재력을 지닌 노동계급을 만든다.

이런 점에서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했고, 노동자들의 저항에 거듭 부딪혔다.

이는 여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핵심 특징이다. 자본주의는 나라마다 이런저런 특수한 외양(중앙 계획 경제의 존재 여부, 정치 구조의 형태, 지배자들의 통치 이데올로기 등)을 띠

지만, 모두 경쟁적 축적의 동력으로 움직인다.

이는 스탈린주의 체제가 무너진 오늘날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계속해서 경제 위기와 불평등, 대중 저항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의 본질적 성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중국이나 북한을 이해하는 데서도 필수적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즉 사회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것인지 하는 물음과 관련돼 있다.

더 읽을 거리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제4장 1953년 독일 노동자들의 항쟁’
크리스 하먼 지음, 김형주 옮김, 갈무리
464쪽, 12,000원

러시아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가?

이 전쟁의 직접적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었고 러시아 제국주의는 이 전쟁의 한 주요 동인이다. 그러나 결코 유일한 동인은 아니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지만 보서는 제1차세계대전을 낳은 적대 관계와 국가 간 경쟁을 이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삼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은 2014년에 시작됐고 그 이후 죽음과 파괴만 남겼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침략에 진보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다. 대학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결의문이 밝히듯 푸틴의 침략은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러시아군은 당장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군사 동맹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몰락 이후 벌인 책략을 논하지 않고서는 러시아의 침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처음에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를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뒤 러시아와 대결하는 쪽을 택했다. 1990년 이후 13개국이 나토에 가입했고 나토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800마일 [약 1300킬로미터] 이동했다.

또한 나토는 그 외 나라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키우려 애썼다. 이것은 함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말하며, 나토는 이를 강화하면서 군대를 무장시키고 훈련하고, 유럽 전역에 병력을 배치해 전쟁 태세를 갖추게 했다.

미국 국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굴욕을 안겨 주고 러시아를 약화시킬 기회이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패배를 극복할 기회다. 또, 미국의 더 크고 중요한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결권은 미·러 제국주의간 충돌에 완전히 종속돼 버렸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방에 의해 총알받이 신세가 돼 몸서리칠 만큼 많은 수가 서방, 특히 미국의 권력과 세력권 확장을 위한 싸움에 동원돼 죽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대리전”의 의미다.

이 대리전은 그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한 충돌이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지배 블록도 편들어서는 안 된다.

나토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나토 군사 동맹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나토는 1947년에 지도적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창설한 기구다. 나토는 미국·영

국·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공격적 기구다.

최근 나토는 중립을 표방하던 핀란드 등을 동맹으로 끌어들었다. 이는 핀란드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국경에서 충돌하는 무시무시한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긴장을 고조시켜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초래한 것도 나토였다. 따라서 이 전쟁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나토의 개입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푸틴의 군사적 승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토가 승리해도 우크라이나는 종속국의

로 전락할 것이다. 이 경우, 서방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만 다를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 제국주의의 노리개가 될 것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전후 우크라이나가 “커다란 이스라엘”처럼 될 것이고, 유럽처럼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영화관과 슈퍼마켓에 군대나 국민방위군의 파견자가 배치돼 있고 사람들이 무장하고 있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향후 10년간 안보 문제가 최우선 쟁



철저하게 파괴된 바흐무트

사진 출처: 우크라이나 국군공모부

우크라이나 전쟁: 동·서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한다

최근 영국 대학노조(UCU) 대의원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다. 대의원대회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략뿐만 아니라 나토도 규탄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그 결의문을 폐기하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 결의문을 발의한 손 버넬이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물음에 답한다

경쟁하는 제국주의 전쟁광들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까? 답은 아니오다

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이스라엘처럼 제국주의의 무장한 전초 기지로 만들겠다는 전망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붓는 것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움이 되나?

러시아 국가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맹포격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학살을 멈출 가장 빠른 방법으로서 압도적인 나토의 개입에 기대게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쏟아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또, 경쟁하는 제국주의 전쟁광들이 정말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까? 그렇지 않다. 역사가 보여 주는 바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더 근래의 사례로는 걸프 전쟁을 보면 “인도주의적” 개입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제국주의의 개입이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더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의 논리적 결과가 무엇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 미사일에는 미사일, 총알에는 총알로 러시아와 대결하게 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올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제국주의 세력은 어디서 멈출까? 처음에 우크라이나 국가는 미국에 F-16 전투기를 요구하더니 그 다음에는 순항 미사일을 요구했다.

아마도 다음에는 러시아 영토로 밀고 들어가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맞설 더 공격적인 무기들을 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1991년 냉전 종식 후 어느 때보다 핵전쟁에 가까이 있다.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이 전쟁의 확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무기가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것임을 이

▶ 15면으로 이어짐



더 많은 무기 지원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미국에게 받은 M777 곡사포를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

▶ 14면에서 이어짐

해한다. 비록 이것이 소수의 견해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공격당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제국주의 세력에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한다고 해서 좌파가 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무기가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불행히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동·서방에서 일어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에서 시작된다. 전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전쟁광들에 맞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내 반전 운동에 전적으로 연대하면서도 영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에서 더 강력한 반전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감옥행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형감이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에 기초한 거대한 대중 운동만이 이 전쟁을 끝장낼 것이다. 그런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역사를 보면 전쟁에 대한 노동계급 사람들의 생각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스코틀랜드의 혁명적 지도자 존 매클린은 전쟁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다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직면했다.

그러나 4년간 참상이 이어지자(그 사이에 매클린은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고 고문당했다), 매클린에 분노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 이제는 매클린이 반제국주의 입장을 고수한 것을 찬양했다.

전쟁의 끔찍함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매클린처럼 전쟁에 반대한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매클린과 그 밖의 사회주의자들은 평화를 노동계급이 스스로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들에게 평화란 제국주의 지도자들의 개입으로 선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지배자들에 맞서 분출하는 저항이라면 모두 환영해야 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이 임금, 치솟는 물가, 필수 서비스 긴축을 둘러싼 노동계급 사람들의 투쟁들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왜 반전 운동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결의안 따위는 무의미하고 노동조합원들은 노사쟁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같은 종류의 정치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국제주의가 노동조합 운동의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지배계급이 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계급을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 노동계급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 매클린이 말했듯이 “총검의 양쪽 끝에는 노동자가 있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 싸울 때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 노동계급의 편이다.

둘째, 우리가 전쟁 반대 결의안을 발의해야 했던 것은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친제국주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거기에 도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국노총(TUC)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영국 무기 산업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을 지지했다. 우리는 그런 결의안을 반대하고 뒤집어야 한다.

노동조합원으로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결코 같은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해야 한다.

출처 Sean Vernell, 'Ukraine — say no to imperialism east and west' (2023. 6. 2) / 번역 김재현

프랑스

연금 투쟁에서 임금 투쟁으로

프랑스의 연금 항쟁 이후 새로운 저항의 층위가 형성되고 있다고 파리 현지의 혁명적 좌파 활동가 드니 고다르가 전한다.

[6월 6일에]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연금 공격 반대 행진을 벌였다. 1월 이래로 노조 지도자들이 소명한 열네 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었다.

이 시위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공격에 맞선 저항이 끝나리라는 보도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정은 틀렸다.

시위대 수가 올해 초에 전뿔 줄어든 것은 노조 지도부의 전략으로는 더는 전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노조 지도자들은 의회 내 책략과 이따금 열리는 전국 행동의 날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다.

그러나 답보 상태에 직면하자 운동은 형태를 바꿨다. 대규모 항쟁을 통해 얻은 전투력과 자신감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지역 차원의 투쟁에 되먹임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6월 2일]에 아동복 브랜드 베르보데의 노동자들이 75일에 걸친 파업 끝에 승리를 거뒀다. 베르보데의 여성 노동자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파업해 본 적이 없었지만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와중에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토요일[6월 3일]에는 파리 디즈니랜드 노동자 약 2000명도 비슷한 종류의 요구를 내걸고 놀이공원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파업·시위 사흘째였고 이들의 운동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여러 도시에서 서점 노동자들이 임금 문제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투쟁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베르보데에서 파업이 시작된 계기는, 다른 회사 소속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중에 조직한 피케팅[파업 동참을 촉구하며, 대체인력 투입과 파업 대오 이탈을 막는 시위]이었다.

이 피케팅을 보며 자신감을 얻은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서점 노동자 파업은 ‘북블록’이라는 조직이 생겨난 것이 계기가 됐다. ‘북블록’은 매주 모임을 열어, 그 전까지는 대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서점 직원들을 연금 개악 반대 운동에 참가하도록 조직했다.

디즈니랜드에서도, 투쟁이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외부에서 시작됐다. 노동조합은 파업 2일차가 돼서야 투쟁에 참가했고, 이 투쟁에는 ‘인플레이션 저지 운동’이라는 이름의 자체 조직이 있다.

거리 시위를 중시하고 파업을 뒷전에 두는 노조 지도자들의 전략은, 대안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풀뿌리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몇 달 동안 운동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투쟁이 늘어나면 이전까지 운동에 부족했던 그런 풀뿌리 조직을 건설할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반격은 경제 쟁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일요일[6월 4일]에, 파시스트에게 살해된 활동가 클레망 메릭의 10주기를 추모하며 파시즘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파리 거리를 행진했다.

출처 Denis Godard, 'From pensions to pay fight' (2023. 06. 06) / 번역 박이랑



우크라이나 댐 파괴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이미 아수라장으로 변한 우크라이나가 더한층 재앙적인 땅이 되고 있다.

6월 6일 노바 카호우카댐이 파괴돼 드니프로강 하류 일대가 물에 잠겨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했다.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150톤의 산업용 윤활유가 유출되면서 환경 재앙에 직면해 있다.

이재앙은 드니프로강 일대의 곡창지대와 세계 식량 공급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드니프로강에서 냉각수를 끌어오던 자포리자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이 커졌다.

젤렌스키는 즉각 러시아의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미국은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현재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다 댐 파괴가 상대방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댐을 바깥에서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남부 전선을 물바다로 만들 생각이었다면 그냥 수문을 열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증거 또한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에서 이런 미스터리에 직면해 던져야 할 물음은 누가 득을 보느냐는 것이다.

언뜻 보면 러시아가 득을 보는 듯하다. 댐 파괴로 우크라이나군이 댐 상류



카호우카댐 파괴는 제국주의적 대결이 초래할 비용이 무엇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에서 자포리자로 상륙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하류에서 남부 전선의 우크라이나 진지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러시아 진지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다. CNN은 한 우크라이나 군 장교의 말을 인용해 그곳의 러시아 병력이 사태에 전혀 대비돼 있지 않았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보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형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크림반도에 물을 공급하던 운하도 타격을 입었다.

남부 전선이 물에 잠겨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많은 언론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소모전으로 허덕이는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가 헤르손으로 다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을 한동안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전으로 손상이 누적돼 댐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 BBC는 포격으로 "댐의 상태가 여러 날에 걸쳐 악화됐음"을

보여 주는 위성 사진을 방송했다. 포격은 양측 모두로부터 있었다.

'테이아 토지 데이터 센터' 등의 자료를 보면 카호우카호의 수위는 이미 5월 초에 유례없는 수위로 높아졌다. 이것은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강 상류의 또 다른 댐들의 수문을 의도적으로 열었는지, 아니면 러시아가 댐을 실제로 파괴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두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은 아랑곳없이 냉혹한 전쟁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서방은 러시아의 무모함을 부각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도 여러 차례 무모한 일을 벌여 왔다. 자포리자 핵발전소 인근에서의 교전이 그런 사례다.

지난해 12월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이 댐 파괴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 카호우카댐 수문을 시험 삼아 타격해 세 개의 구멍을

냈다. 러시아군의 도하에 차질을 주되 주변 지역을 침수시키지는 않는 선에서 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현재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단지 꼭두각시인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을 최대한 끌어들이 자국 방위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라 전쟁을 키울 위험한 모험들을 감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 수위를 조절하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를 출혈 시키기를 바란다.

카호우카댐 파괴에 대한 미국의 유보적 태도는 이번 사태가 통제할 수 없는 확전으로 치닫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인 듯하다.

카호우카댐이 파괴된 시점에 공교롭게도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의 발트해 노르트스트림(러시아 산 천연가스를 독일 등으로 공급하는 해저 가스관) 폭파 계획을 미국 정부가 폭파 3개월 전인 6월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물론 러시아 지배자들은 자신의 전략적 이점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런 재앙을 일으킬 자들이다.

그러나 서방 또한 패권을 위해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원웅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일시 | 6월 14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규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61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